

<b>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b>			<b>보도자료</b>
배포	2023년 7월 5일 (수)	문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상황실장 최명선(민주노총): 010-9067-9640 기획팀장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10-7767-9618

##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 일시 : 2023년 7월 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조 발언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및 생명안전 후퇴 추진 현황  
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대표 김미숙)

▶ 공동행동 출범 취지 및 투쟁 계획 발언  
공동행동 공동대표 (노동당 이종희 공동대표)  
공동행동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대표)

▶ 현장발언 1 : 마트 의무 휴업일제 후퇴 저지 결의 발언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정민정

▶ 현장발언 2 : 건설노조 탄압 및 안전기준 후퇴 저지 결의 발언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강한수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의당 조귀제 노동부대표, 진보당 최영희 조직국장

### ※ 퍼포먼스

▶ 붙임 자료 : 추진 경과 및 사업계획(2쪽), 발언문(10쪽) 기자회견문(17쪽), 공동행동 참여단 위(18쪽)

# 추진 경과 및 사업계획 (안)

## 1. 개요

10.29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동의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 기업 처벌강화 등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제기하고 일부 진전된 성과마저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윤석열 정부의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합니다.

## 2.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개악 추진 현황

###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 TF 논의 결과 7월 발표

- 2021년 10만 동의청원, 유족등의 단식 농성, 전국적인 행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 2022년 기재부를 앞세워 법을 뛰어 넘는 시행령 개악 추진
- 2023년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발족>. 과징금 도입으로 형사처벌 완화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 7월 중순 TF 논의 결과 발표
- 경영계 지속적인 법 개악 요구. 5월 개악 의견서 제출 (형사처벌 삭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담당 이사로 대체, 원청 처벌 삭제,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등)
-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중대재해 약 300여건 중 20건 내외만 기소, 재판은 3건만 진행. 재벌 대기업은 기소하지 않고 수사 장기화, 법 개악 추진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
-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을 위해 법 개악 강력 추진
- 국민의 힘 노동개혁 특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선언
-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적용유예 연장 시 중대재해 감소는 불가능. 확대되는 사회 양극화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예방과 처벌까지 차별을 확대할 수 없음

### 2) 현재 진행형인 노동시간 개악 하반기 본격화

- 장시간 노동, 압축 노동으로 매년 과로사 500명, 사고, 과로자살, 직업병 증가, 시민안전도 위협
- 국제노동기구는 주 48시간 한도, 1일 10시간 이내 제한 국가 다수. 주 4일제 노동 도입
- 주 69시간 (80시간) 노동시간 개악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도 폐기하지 않고 입법 추진
- 입법예고 이후 대국민 홍보 부족이라며 조사사업 진행. 하반기 입법 추진 전망

### 3) 노동자 처벌 확대, 원청 책임 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7월부터 입법 추진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추진단을 발족. 법, 시행령, 안전보건기준규칙 전면 개정 수준의 개악 추진
- 법 개정은 노동자 처벌 확대, 원청의 책임 완화 등으로 김용균 노동자 죽음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을 추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예방규정과 처벌규정으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안전보건기준을 고시, 가이드로 정리하여 현행의 5년 이하 형사처벌 조항에서 삭제 추진
- 법 위반에 대한 기업 처벌, 원청 책임은 줄이고,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사업장에서 징계, 해고가 남발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 4) 화물안전 운임제 폐기, 마트 의무 휴업일제 후퇴, 안전점검하면 타워기사 면허 취소

-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도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안전운임제>를 폐기하고, 화물연대 지속 탄압
-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마트 평일 의무 휴업일제> 폐기 추진.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 대구, 충북이 폐기되고 전국적 확산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도입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등 평가항목 대폭 축소, 무력화
- 대법원에서 임금으로 인정된 타워기사 월레비를 호도하여 노조탄압,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주52시간 준수, 안전점검, 안전작업 준수를 태업으로 몰아 기사면허 취소
- 건설노동조합의 산재예방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몰고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노동조합 말살 작전 전개하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의 향거에도 압수수색, 구속 남발

## 3.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가)

### 1) 주요 의제와 요구

- 과로사 조장법 노동시간 개악 저지
- 노동자 처벌 확대 산안법 개악 저지
- 기업처벌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 화물 안전 운임제 연장 확대/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저지
- 중대재해 처벌법 엄정 집행과 책임자 처벌

### 2) 활동 시기

- 2023년 7월 5일 발족식 2024년 6월까지

- 개약 저지 및 총선 대응 사업 전개하고 해소

○ 7월 발족

- 노동부 산안법 개약은 7월부터 개별 조항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추진으로 일정이 제시되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7월 중순 TF논의 발표 이후 입법 추진. 2024년 1월 27일 적용되는 50인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위해 국회 입법 처리가 필수적임.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약 방향이나 입법예고 추진이 7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공동행동이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개약 추진을 하면서 ‘처벌에서 노사 자기규율 예방’으로 전환하고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확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7월 2일은 문송면 원진 노동자 35주기 추모. 35년 동안 달라지지 않고, 하청 비정규에 전가되는 산업재해의 현실 제기하는 출발점

○ 2024년 6월까지 집중 공동 대응하고 해소

- 공동행동은 2024년 상반기까지 개약저지를 위한 집중 연대 활동을 위한 한시적 기구임.
- 개약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2024년 총선 시기 생명안전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까지 연계시켜 집중 활동하고, 해소함.

3) 주요 사업

○ 생명안전 후퇴 개약 중단 선언 및 서명운동

- 생명 안전 후퇴 개약 중단 촉구 공동선언
- 단체별, 의제별 선언 취합 발표
- 개약 중단 선언 인증샷 전개 확산



- 7월 이후 ~ 10만 서명운동 (참가 단위 회원, 대 시민 서명)
- ※ 서명은 정부의 안 발표 이후 내용을 정비하여 돌입 시점 판단하여 집행
- 7월 이후 대시민 선전전, 캠페인, 사진전과 서명운동 연계
- 광장사업: 투표/ 스티커 투표/ 국민동의청원 등 다양한 방식
- 서명지 전달 및 기자회견 면담 요구 등
- 생명 안전 걷기 대회 등

##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 의견서 제출

- 입법예고 이후 (10월 ~ 11월 예상)
- 단체별 의견서 제출 및 공동, 부문별 기자회견
- 생명안전 관련 주요 인사 기고, 인터뷰 등 참여 조직

※ 산안법 개정안 부분별 입법예고시 대응 방안 추가 논의

## ○ 7월 사업

- ① 7월 2일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35주기 마석 추모제 참여 - 집행
- ②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날 기념식 대응 - 집행
  - 기념식 행사장에서 항의행동 진행.
  - 기념식에서는 민주노총 참여 개악 중단 촉구 메시지 발표
- ③ 릴레이 기고 - 집행
 

[생명안전 후퇴 개악저지 투쟁] - 매일노동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공동게재

  - 6월 30일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 ‘내가 생명안전 후퇴 개악 저지 공동행동’ 에 나서는 이유
  - 7월 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 문송면의 죽음 후 35년 후퇴는 없어야 한다
- ④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 안전 버스킹(안)
  - 중심 주제와 각 의제별 이야기 구성
  - 생명안전 개악의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하는 마당으로 진행
  - 시민참여 퀴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구성

- 발언대 : 현장 직접 참여, 카톡 오픈 채팅방 개설로 창구 마련

○ 1차

- 일시 7월 12일 오전 11:30 - 12:30 / 광화문 정동길
- 의제: 노동시간 개악 의제
- 이야기 마당  
장항미 (에스티 유니터스 과로자살 산재 유가족)  
마트 노동자  
운송 노동자
- 문화 공연 : 연영석

○ 2차

- 일시 : 7월 22일(토) 오후 5시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의제: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한가
- 이야기 마당  
건설노조 건설기계 분과  
IT 노동자  
산재 유가족
- 공연 : 선과 영

⑤ 연속 토론회(안)

- 일부는 7월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후 일정 조정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의 문제점

- 목표: 경총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TF 결과 등을 비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및 적용 과정에서의 과제 등을 짚는다.
-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7월 둘째 주
- 주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추진
- 주요 구성  
발제 1 : 민변 강은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TF 결과 비판  
발제 2 : 지금까지 기소 내용 비판  
토론 1 : 소규모사업장 문제  
토론 2 : 노동안전보건단체/다시는 : 제정운동을 했던 주체들의 평가  
토론 3 :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의 문제점

- 목표: 산안법 개정안이 일부(위험성평가/ 노동자 의무) 나오면 그에 대해 원칙과 비판,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 진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토론
- 주요 구성
  - 발제 1. 위험성평가 개정안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 :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 발제 2.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박다혜(노동자권리연구소)
  - 발제 3 민주노총의 산안법 개정 요구안
  - 토론 1. 현장에서 본 위험성 평가 개선 과제 : 최진일 (새움터) 혹은 금속노조
  - 토론 2. 산안법이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 : 건설노조
  - 토론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 노동조합과 생명 안전

- 목표 :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 성장시켜온 사례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왜 생명 안전 후퇴 정책인지를 짚는다.
- 주요 구성
  - 발제 1 : 건설노조
  - 발제 2 : 공공운수노조 : 위험의 외주화 문제제기 : 구의역/김용균, 궤도 중대재해
  - 발제 3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지회 : 산재 은폐 드러내기
  - 발제 4 : 노조 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안전보건 : 반올림, 직장갑질119(직장내괴롭힘), 과로사 사례, 삼성중공업 트라우마 대응 등
  - 토론 : 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혹은 노사협력정책과

## ⑥ 경총 및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요구의 문제점

-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동향과 문제점 분석 이슈페이퍼

## ⑦ 중대재해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서명운동 참여 - 집행 중

-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서명운동 및 전국 동 다발 기자회견 참여
- 서명 내용 : 검찰의 능장수사 및 기소, 대기업 봐주기 기소, 낮은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신속한 기소와 엄정 집행 요구
- 온라인 서명 : [bit.ly/검찰은중대재해기업엄정처벌하라](https://bit.ly/검찰은중대재해기업엄정처벌하라) : 7월 17일까지 진행
- 7월 19일 중앙은 대 검찰청 앞, 전국 동시다발로 서명지 전달 및 기자회견 진행

○ 선전, 언론, 홍보 사업

- 생명안전 개악 포스터 제작, 지하철 부착 추진
- 각 진행 사업마다 정리 기사화 작업 진행 : 별도 담당 배정
- 기획보도 추진

○ 페이스 북 개설

- 생명안전 후퇴와 개악 관련 자료, 공동행동 활동, 언론보도 등 공유
- <https://www.facebook.com/NoCorporateManslaughter>



○ 모의법정

- SPL, 현대중공업, 동국제강 등 피해자 유족 혹은 노동조합이 있는 중대재해에 대한 모의법정 진행

○ 중대 재해 사진전, 만화 제작, 문화 공연

○ 생명 안전 / 산업재해 관련 노래와 율동 제작

○ 시민 참여 사업

○ 전문가, 지역, 정당 참여 사업

○ 10월 전국 순회공연, 이야기 마당 등 지역별 사업 전개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안전대책 토론회

○ 2024년 총선 시 생명 안전 법안 정책 사업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강화 법안
- 생명안전 기본법

- 건설안전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총선 대응 사업 전개
- 위험작업 작업중지, 노동자 참여등 산안법 개정 강화 법안

○ 민주노총 자체 사업(안)

- 개악 안 발표 시 긴급 집중 집회
- 10월 전국 순회 투쟁
- 생명안전 개악저지 집중 집회 : 10월 19일(안)
- 문화공연
- 여론조사 사업

## 발언문 1.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처음에는 노동자와 시민들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는 이 세상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기 전 나는 어땠나? 돌이켜보면 저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저 좋은 것만 쫓아 보고 듣고 갈망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이웃의 안녕이 내 안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던 무지함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발전한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별 탈 없이 살아갈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정치적으로 내 삶을 전부 옥죄도록 지배당하고 있었음에도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바꾸려면 국민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내 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고, 아들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기에 이름도 생소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안법은 전면개정 되었지만 부족함이 있었기에 아들 동료들을 살릴 수 없는, 또다시 용균이를 기만한 법이라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을 막고자 영국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사고유형이 서로 다른 유족들을 중심으로 법안 준비과정을 거쳐 법제정운동을 하고, 30여일 단식까지 감행하며 열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경총과 기업이 반대가 심했지만 국민 72%의 찬성으로 납작하게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경영계는 개악을 요구해 왔고, 윤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자식들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 때려잡기 바빴습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의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는 요구에 ‘손배 폭탄’ 으로 노동자들을 때려눕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의 졸음운전 막지는 ‘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에는 불법 낙인을 찍고, 양대노총 사무실에 대한 강압적인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이 노조를 불신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량한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매도하고 급기야 노조원들을 수십 명씩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윤정부의 이러함은 애초부터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해 오로지 차기 집권행보로 보입니다.

진짜 법을 어기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윤정부였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으로 부당한 회사에 맞서 뭉치고 단결해서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윤정부는 특하면 불법 운운하고 검경은 윤정부 허끝에 놀아나 알아서 기기 바쁘고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라서 더

죽어나가는 세상을 보고 있자니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 피로 만든 민주주의가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다니 가슴속에 온통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 속에 내 아들 목숨도 들어있는데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업 입맛에 맞게 윤정부가 발맞추고 관련 부처가 나서서 산안법을 손보겠다고 하며 노동자의 과실로 책임 전가하고 원청 책임은 완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처벌은 고작 세 건 밖에 없다보니 아직도 한해에 2400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한 이유 아납니까? 그 세 번의 처벌 수준도 구 산안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저급한 수준입니다. 거기다 이미 3년이란 시간을 충분히 유예하여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경총과 중기부는 더 유예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고 80%나 차지해 더 시급한일인데 기업만 두둔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허용시키는 저급한 태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못 할 게 없는 야만적인 식인 풍습을 우리들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방치로 자식을 잃고서도 살아야하는 이런 기막힌 삶 더는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자 살림은 더 쪼그라들고 자식까지 잃어가면서 경제발전함이 도대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우리의 발버둥을 저들은 자꾸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고 부족한 걸 채워가기 위해 싸우는 과정도 법제정운동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 모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데 함께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에 미친 야만인들을 단속할 민주시민이 다시 일어나 ‘생명안전 개악저지 공동행동’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 발언문 2. 이종희(노동당 공동대표)

1988년 7월 2일 문송면 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취업한지 2달도 안되어 이상증세가 나타났지만 처음에는 원인도 알지못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녔습니다.

1964년 일본 도레이에서 노후설비를 가져다가 가동하던 원진레이온에서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여름 시작된 직업병 인정 투쟁은 1993년에서야 일단락 되었지만 현재까지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250명입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은 2007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비롯해 각종 암 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반올림이 된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지난한 투쟁이 있고 난 이후에야 직업병,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컨베이어벨트에서 혼자 일하던 김용균이 죽었고, 학습이 아닌 조기 취업, 불법 노동이 된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으로 어린 학생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명과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투쟁,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투쟁이 있었고, 이에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발병이 늘어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 위한 대책위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개발과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 노동자들이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죽음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원인을 알고도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본의 이윤을 위해 결과를 내다보면서도 노동자를,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위험을 외주화하고, 자본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노동자의 책임을 늘리고,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소규모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적용제외와 유예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 노동당 이종희 공동대표

### 발언문 3. 김찬휘(녹색당 대표)

우리는 2018년 12월 11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한국서부발전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노동자 김용균이 숨졌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위험을 외주화’하는 중층적 하청 구조가 어떻게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은 2021년보다 산재 사망자가 줄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산재 사망자는 644명으로 2021년보다 3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수는 오히려 8명 늘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 처벌범위도 넓고 형량도 가혹하다고 아우성친 경영계와 보수언론들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예방에 효력이 없는 증거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이었다면, 어떻게 산재 사망자가 늘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의한 첫 판결이 나온 날이 올해 4월 6일입니다. 그나마 원청 대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수사는 지연되고,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는 작년에도 겨우 34건, 그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겨우 11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지연되고 판결은 솜방망이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이렇듯 문제의 원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비참한 산재사고 통계를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근거라고 강변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공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축소하며, 내년에 적용이 시작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더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국이 1970년대에 자율규제에 기반한 법 시행으로 산재 사망을 현저히 줄였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이 영국처럼 자율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조의 힘이 강력했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았던 1970년대의 영국보다 2023년의 한국은 훨씬 열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랬던 영국도 자율규제의 한계를 깨닫고, 2008년에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더 강력한 처벌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맞게 적용한 것이 중대

재해처벌법입니다.

산재의 지옥 대한민국에서 ‘자율규제’ 를 외치는 것은 노동자를 계속 살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책임성 있게 법을 집행해야 노동자의 죽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자율규제도 생겨날 것입니다. 엄정한 처벌이 계속되어야 비로소 이 산재 공화국은 종언을 고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사회정의’ 의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강령은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4.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

지난 6월 19일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그날,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운명하신 마트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출근 준비를 하였고, 출근하여 동료들과 대화도 나누었을 그날, 오전 11시부터 내내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 켠에서 잠시 쉬던 중 쓰러진 31세의 젊은 노동자는 결국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폭염에 달궈진 시멘트로 만들어진 주차장의 열기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에어컨이 있는 5층 휴게실을 다녀오기엔 휴식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쉴 시간이 없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문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총 4만 3천 보를 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크고 무거운 코스트코 철제 카트를 십수대에서 이십대씩 한 묶음으로 밀고 다니며 근무 시간에만 26km를 움직였던 겁니다.

매출 5조원이 넘는, 매장에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코스트코에서 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져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루에 4만보 이상을 걸으면 철제카트를 옮기고 있을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위 시작입니다. 이러다가 코스트코에서 언제 또 노동자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주차, 카트노동자들은 대부분 외주화 되어 있어 그들의 노동안전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노동자들 역시 물건을 싣는 공간이 주차장입니다. 주차, 카트, 배송노동자들이 폭염과 폭우, 한파에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닌 공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코스트코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정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코스트코에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된 마트에서의 노동을 견딜수 있도록 한대는 10년전 도입된 일요일 의무휴업의 힘이 컸습니다. 집안 행사에서도 소외되고, 아이들과 놀이동산 한번 제대로 못가면서 내가 이렇게 일해서 뭐하나 싶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인간다운 삶인가에 싶어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달에 2번 일요일을 쉴수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 눈치보면서 미

안해하면서 쉬는게 아니라 다같이 쉬는 일요일은 완전히 다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니 마트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래 일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요일을 윤석열정권이 없애겠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외면으로 포기한 척 하더니 지금은 국민의 힘 지지체를 중심으로 슬금슬금 변경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민주당, 국민의 힘 가릴 것 없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영업을 허용하자고 합니다. 미친거 아닙니까?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허용하면 로봇이 나와서 일을 한답니까? 결국 노동자들이 나와서 피킹하고 배송해야 하는데... 왜 우리의 일요일을 뺏지 못해 안달입니까?

유통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마트노동자들의 쉼 권리를 박탈하려는 윤석열정권을 가만히 둘수 없습니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이 7월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 강화하자고 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폭염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는 노동자가 없게, 사회적 휴식권을 박탈당한채 일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트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 오늘 출범하는 공동행동과 함께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도 모자라,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화물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 운임제를 폐기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일요일 의무 휴업일제 폐지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사회적 저항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2,400명 산재사망, 세월호, 가슴기 참사 등 반복적인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그나마 대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난 수 십년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96개 참여 단위 일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산재사망 해결촉구 지원모임,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시민넷, 성공회대 노학연대 가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안산노동안전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 운동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 운동본부, 진보당, 천주교 남장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 청년유니온,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학생 사회주의자(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